

당정 '짚통학교' 없앤다...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나서 복지시설 7~8월 최대 50만원 전기사용 절약 캐시백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올해 여름 '짚통학교'를 없애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사·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시·도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단위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서 전기를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폭염 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방시설의 작동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도 사·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짚통학교 외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도 당초보다 1500대를 추가해서 1만5000대 규모로 보급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7000개"라며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여

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용 절약에 따른 캐시백을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 전기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키로와트시(kW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절감하면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으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해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 드리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규 교육위원회 간사는 "쾌적한 교육·교실 환경 만들려면 학교를 여름철 전기로 부담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학교가 전기로 부담 없이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중하는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름철 최고의 교육복지"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전국 어디서든 기업의 역동적 성장 뒷받침"

규제 개선 통한 투자 증가 강조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 증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 규모가 1.5조원이었는데,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6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는 정부 재정으로 만드

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위' 존속... 2029년까지 연장

농어업·촌 지속가능 발전 역할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 존속 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위는 농어업계의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부처·범농업계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2024년 4월24일까지 운영을 명시한 농어업위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농해수위는 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7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통폐합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고, 그 기능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치권,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 언급 '눈길'

尹, 사석에서 국힘 170석 제시 이정미 "정의당, 최소 20석 목표" 양향자 "50석 이상...전 지역 공천"

여야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의 목표 의석수가 회자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수를 170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를 못하면 식물정부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반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그런 각오로 국정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났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잡기로 제대로 3대 개혁 등이 쏙속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70석이라는 것은 과반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밀려온 숙제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한번 국민 뜻에 맞춰서 토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 관계자들이 모인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재창당 작업을 추진중인 정의당은 차기 총선 목표 의석수는 최소 20석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까지는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최소한 20석) 정도는 기대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한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서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

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의석으로 부족하니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면 문 자체가 닫히게 되는데 다당제 구조가 되면 한쪽이라도 더 설득하려고 논의 테이블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희망' 창당을 선언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5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 지역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450 즉, 2024년도에 50석 이상은 기본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돈키호테 정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제는 우리가 건너가자. 기존 정치를 고치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野 '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단독 처리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힘 '협의없이 제출' 퇴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여 안건으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만 (동의한) 결의안이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다"며 "방류가 코앞에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류한다고 발표가 됐다. 그때 국회에서 이미 결의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라고 말했다.

8일째 단식중인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해라, 왜 민주당은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주 불안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면서 헛집 먹방을 한다"며 "헛집 먹방을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